

# 주간 이슈 리포트

70 호

2005년 1월 넷째주(1/31 ~ 2/5)

## ◎ 주요내용

- |            |                      |
|------------|----------------------|
| - 세상돋보기:   | 'X-파일'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
| - 노동자 세상:  | 제조공동화인가 제조업 퇴행화인가?   |
| - 통신정책:    | 성큼 다가온 휴대인터넷         |
| - 정자동 6층에서 | 기아차, 분노와 질타의 옥석을 가려야 |
| - 만화방      | 시사 만화                |



## ‘X-파일’ 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OECD 프라이버시 보호 8대 원칙을 아십니까?

"연예인 X파일 봤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으레 한마디씩 건넬 만큼 연예인 X파일은 요즘 장안의 최대 화젯거리이다. 하기가 그럴만도 하다. 오프라인에서는 스포츠 신문의 옐로우 저널리즘에, 온라인에서는 포털 뉴스의 선정적 편집에 한껏 길들여있던 독자들에게 연예계 뒷담화가 종합 선물세트처럼 푸짐하게 안겨졌으니 이 어찌 흥미롭지 않으랴.

게다가 연예인 이름을 감질나게 영문 이니셜로 표시해서 추측만 무성하게 만들던 종전의 연예계 기사들과 달리 인기 스타들의 실명이 액면 그대로 드러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화끈한 일인가.

행여나 아직까지 못보신 분들을 위한 언론의 배려는 또 어떠한가. 가장 구미가 당길 만한 내용들을 짹짹 훑어주면서 호기심을 자극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기어코 찾아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이끌어낸다. 이렇게 모든 언론이 이 문서의 독자층 확대를 위해 술선수법에 나섰으니, 장담컨대 연예인 X파일은 2005년 한국을 강타한 최고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일찌감치 예약해 뒀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X파일이 어디 이것 뿐이라. 과거 노태우 정권 시절에 보안사가 재야 인사와 야당 정치인들을 사찰하기 위해 작성한 X파일이 폭로된 것도 벌써 15년 전 일이다. 불과 몇 달 전에는 보안사의 후신인 국군기무사 산하 공안문제연구소가 소설, 논문, 사회과학 서적 등에 대한 X파일을 작성해 왔음이 밝혀져서 쟁점화 된 일도 있었다.

증권가에 은밀히 나도는 주요 기업이나 재계 인사들에 대한 X파일 역시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린지 이미 오래이다. 비록 인기 스타들의 X파일만큼 호기심과 흥미를 잔뜩 자아내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류의 X파일은 늘 존재해왔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여기까지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재벌 등 나오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일이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지극히 평범한 보통사람들의 입장에서야 X파일은 자신과 상관없는 딴 세상 뉴스거리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알고 보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X파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보화의 진행과 함께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가 곳곳에서 암암리에 수집되고 있는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당신의 쇼핑내역은 지금도 기업의 고객 DB에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다. 이 기록이 당신의 기본적인 인적 정보와 결합되면 현재의 당신의 생활수준과 소비패턴, 개인적 취향까지 말해주는 X파일이 생성된다.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도 보이지 않는 눈에 의해 끊임없이 관찰되고 있다.

합법적인 CCTV와 불법적인 몰래카메라에, 심지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눌러대는 누군가의 디카나 폰카에 우연히 찍히는 것까지 합친다면 당신의 모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딘가에 노출되고 저장되고,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또 다른 X파일이다. 당신의 X파일 역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X파일 역시 유출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연예인 X파일을 희희낙낙 둘러보며 말초적 자극이나 충족시키고 앉아있을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 연예인들은 X파일의 작성자인 제일기획과 동서리서치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혐의 사항에 빠져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공공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기획과 동서리서치 같은 기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넌센스가 빚어진 것이다. 진작부터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던 보다 포괄적인 차원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필요성이 현실로 입증된 대목이다.

일찍이 OECD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8원칙을 만들어 각국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해 왔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번 연예인 X파일이 OECD의 8대 원칙에 어떻게 위배되는가를 비교, 정리해보았다. X파일만 열심히 읽지 말고 이것도 한번 꼼꼼히 읽어 보시라.

1. 수집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 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연예인 X파일은 일부 연예부 기자들의 주관적 평판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에 공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았으며, 연예인 당사자들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밟지 않았기에 '수집 제한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는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연예인 X파일은 연예가에 떠도는 뜬소문들을 객관적인 검증이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서로 구성하였기에 '정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사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 연예인 X파일은 광고주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명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애초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회자되고 있다. 이는 정보 수집자가 '목적 명확화'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있다.

4. 사용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연예인 X-파일은 정보 주체의 동의나 법률 규정과 무관하게 누출되었으며, 누출의 동기도 수집 당시의 목적과 무관하였기에 '사용 제한의 원칙'에 위배된다.

5. 보안 확보의 원칙 : 개인정보의 유출, 권한 이외의 접근·파괴·사용·수정, 누출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연예인 X파일에 대한 보안이 허술했음은 더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특히 정보 보안이 해킹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는 것이 전부라 아니라 내부 정보 관리자의 보안 의식이 보다 중요한 사항임을 일깨워 준다.

6. 공개의 원칙 :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와 특성, 주요 사용 목적과 함께 정보 관리자의 신원과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 연예인 X-파일의 내용을 제공한 연예부 기자들은 애초에 해당 기업이 자신들을 인터뷰한 목적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연예인들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과정에서 '공개의 원칙'이 준수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7. 개인 참가의 원칙 : 정보 주체인 개인은 정보 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존재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합리적인 방식,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정정·보완·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 연예인 X파일에 수록된 당사자들이 이러한 파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것은 이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이후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단계를 넘어 버렸다.

8. 책임의 원칙 : 정보 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 연예인 X-파일이 몰고 온 사회적 파장에 대하여 제일기획과 동서리서치는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두 업체 모두 '책임의 원칙'을 무시한 무책임한 태도이다. <오마이뉴스 민경배(neticus) 기자>

## 제조 공동화인가 제조업 퇴행화인가?

경기가 악화되면서 ‘제조업공동화’ 이슈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중국으로의 생산기지이전을 급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내 산업입지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조업부문의 경우 사양산업의 확산, 한계기업의 증가로 인해 자본측의 ‘제조업공동화’ 공세는 올해 들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은 ‘공동화’라는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통해 사회적 여론을 등에 업고 노동의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저임금과 고비용시스템에 짓어있던 제조업부문 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의 돌파구를 중국진출을 통해 찾고 있지만, 그 성공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하도급체제로 대표되는 불공정거래, 인적투자과 기술개발의 미비 등과 같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프로그램이 지체되면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산업구조의 양극화가 본질적 문제이다. 즉 산업구조의 양극화는 제조업기업들의 내생적 발전가능성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혁신적 발전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바로 이것이 제조업의 퇴행화라고 명명할 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현재 국내 제조업의 상태는 어떠한가? 먼저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추이를 보도록 하자. 제조업의 사업체수는 80년대 중후반 연평균 9.4%에서 2000년 이후 6.1%로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출하액과 부가가치액도 지난 15년 동안 각각 연평균 13.4%, 14.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종사자수는 같은 기간동안 단지 0.8% 증가하는데 그쳤다. 즉 제조업의 일정한 성장유지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신규투자와 신규채용을 기피하고 인원축소에 주력함으로써 제조업 고용환경은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둘째, 제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3년 24.6%에서 2002년 37.0%로 크게 증대되었다. 오히려 서비스업의 비중은 61.3%에서 58.3%로 소폭 감소했다. 부가가치 생산액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경제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제조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제조업 비중의 수치 이면에는 수많은 기업들의 퇴출과 동시에 창업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높은 비중 그 자체가 제조업기업들의 경영안정성과 운영지속성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들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의 진출은 위협스러울 정도로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직접투자 누적액은 1980년 2천 4백만 달러에서 2003년 18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35.7%에 달했다. 연간 투자액도 1981년 5백만 달러 규모에서 2003년 19억 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런 빠른 속도의 증가에 힘입어 전체 해외직접투자누적액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19%에서 2003년에는 53%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현재의 문제는 제조업공동화 그 자체에 있기 보다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되어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로 인한 부작용은 크게 국내기업의 생산축소 및 공장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 해외생산기지에서의 역수입에 따른 국내생산의 축소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해외진출기업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 축소는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진출한 제조업체의 한국산 원부자재 조달 비율은 38.5%로 해외거점에 대한 원부자재 수출이 늘어나 전체적인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게다가 해외거점으로부터의 역수입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해외진출기업 확대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다. 이는 해외진출기업의 목적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비교우위가 없는 중소형 제조업은 저렴한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글로벌기업의 경우는 시장 확보가 목적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국내에서 생산체제를 갖추지 않고 진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비교우위 산업이 국내투자 기회를 외면하고 해외로 이탈하는 부정적 투자 패턴의 비중은 적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의 부정적 효과는 산업·업종별, 대기업·중소기업간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양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신발가죽(32.7%), 섬유 의복(27.5%) 업종의 경우 국내공장 폐쇄의 비중이 높은 반면, 수송기계(97.8%), 기계장비(94%), 전자통신(92.2%), 석유화학(93.8%) 등은 대부분 국내공장에서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5년 이후 국내공장의 유지여부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을 보면(산자부 2003), 국내공장을 보유한 모기업의 55.1%는 향후 5년내 국내공장을 유지 또는 확대, 33.7%는 축소, 8.1%는 폐쇄할 것으로 답변하였다. 업종별로는 신발가죽(39%) 및 섬유 의복(24.8%)이 국내공장 폐쇄 비율이 높았으며, 수송기계의 경우는 84.4%의 기업이 국내공장은 유지 또는 확대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현 단계에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저하와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제조업 전반의 공동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고임금 때문에 한국을 떠나 제3세계 저임금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부가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가 제조업 공동화 여부에 관한 것일 뿐,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국내 고용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 분업체계 및 국내 생산조직 변화는 해외직접투자가 추동되는 조건을 형성하고, 해외직접투자는 다시 국제 분업체계로의 편입양상과 국내 생산조직에, 따라서 고용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조건은 90년대 이후 급속히 악화되었다. 제조업 생산이 빠르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았고, 실업자수와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저임금지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확대추세는 이러한 고용조건 변화와 무관하지 않고, 앞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조업공동화’론은 한국의 경제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논거이다. 한국 제조업은 고용 측면에서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가가치를 유지하는 데에는 성공하고 있어 제조업의 몰락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해외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제조 기반의 붕괴 현상이나 무역측면에서의 악순환도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제조업에서 이탈한 인력이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부문에 흡수되면서 저임금노동이 확대되고 있어서 소득수준의 안정적 확대가 어려운 측면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산업공동화는 아니더라도 ‘제조업의 퇴행화현상’이 가져오는 한국경제의 구조왜곡 그리고 고용관계의 악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제조업의 투자부진과 구조고도화에 대한 모색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조업의 경쟁력약화와 함께 서비스의 저부가가치화가 장기화되어 국민경제적 동력을 상실할 위험은 상존한다. 이런 점에서 특히 제조업의 퇴행화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생존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호<진보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성큼 다가온 후대인터넷

시속 60km로 달리는 차안에서도 인터넷을 끊임없이 접속해 즐길 수 있는 2.3G Hz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서비스가 오는 2006년 상반기부터 시작된다. KT는 휴대인터넷 1위 사업자로 선정되어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과 함께 "움직이면서 인터넷을 즐기는 시대"를 와이브로를 향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와이브로는 기존의 휴대폰 무선인터넷(무선데이터통신)보다 이용요금이 훨씬 저렴하면서도 움직이면서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업자별로 와이브로가 언제쯤 어떤 콘텐츠로 어떤 단말기를 통해 상용화 할지를 전자신문 관련기사로 알아본다.

◆2006년 4~6월에 시작=와이브로 서비스가 가능한 주파수 대역은 2.3GHz대이다 .

정보통신부는 이 대역을 A(2.300~2.327GHz),B(2.3315~2.3585GHz),C(2.363~2.39 0GHz) 등 3개 대역으로 나눠 사업심사 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순으로 주파수대역 선정의 우선권을 준다.

주파수대역이 결정되면 전자통신연구원과 삼성전자 KT SK텔레콤 등은 HPi(High Speed Portable Internet)프로젝트에 따라 오는 12월말까지 장비와 단말기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와이브로 상용서비스는 KT가 가장 빠른 2006년 4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은 이보다 2개월 늦은 2006년 6월로 잡고 있다.

3개 사업자는 서울과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는 2008년말(SK텔레콤은 2009년말)까지 전국 84개 중소도시로 상용서비스 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콘텐츠 차별화 경쟁 본격화=와이브로 수요층은 크게 △10대후반~20대초반의 멀티미디어 추구그룹과 △20대후반~30대초반의 인터넷 비즈니스 추구그룹으로 나뉜다. 3개 업체는 이들을 겨냥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중이다.

KT는 영상채팅이나 영상게임 위치기반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주문형비디오와 네트워크 게임을, 하나로텔레콤은 멀티미디어게임과 인스턴트메신저 등을 주력 서비스로 내세우고 있다.



KT 한 관계자는 "와이브로의 저렴한 요금과 빠른 전송속도, 그리고 휴대이동성이라는 특성에 맞게 무선랜(네스팟)과의 결합상품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갓가지 컨버전스폰 등장한다=KT는 와이브로와 네스팟 등을 결합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와이브로 단말기에 네스팟 기능까지 덧붙인 와이브로스윙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자회사인 TU미디어를 통해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위성DMB와 와이브로를 결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위성DMB+ 와이브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등 듀얼밴드듀얼모드(DBDM) 또는 트리플밴드트리플모드(TBTM)폰을 내놓는다는 전략이다.

KT 한 관계자는 "와이브로는 유무선 또는 통신방송 등 컨버전스를 위해 태어난 서비스"라며 "갓가지 형태의 융합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와이브로 기반기술인 광대역 직교주파수분할다중(OFDM)기술은 4세대 이동통신(4G)표준의 하나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며 "와이브로가 어떻게 진화하는 지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 기아차, 분노와 질타의 옥석을 가려야

온통 기아자동차 채용비리에 쏠려있다. 노동계는 도덕성에 타격을 입고 흔들리고 있다. 이에 언론은 노동운동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말하기보다는 노동운동 말살의 호기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진상조사를 나섰다.

비리는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정관계 유력인사까지 거론되는 등 기아차 광주공장은 온갖 비리와 청탁의 온상이 돼가고 있다. 어찌된 일인지 언론과 검찰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꺼리는 눈치다. 이에 한겨레 논설위원 손석춘씨가 한마디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입사비리'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른바 '전문 브로커' 개입은 물론이고, 인사 담당자의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됐다. 예서 그치지 않는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노동청을 비롯한 관계 인사들까지 관여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짙어가고 있다. 과연 광주지검이 온전히 수사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결국 "일부 노조 간부에 국한된 문제일 뿐 회사 쪽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기아자동차 경영진의 주장은 부도덕한 거짓말이었다. 지금까지 부자신문이 살천스레 떠들어 온 '취업장사'의 주체도 노조가 아니라 경영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의 핵심은 '취업 장사'를 감시해야 마땅한 노조가 '포섭'되었다는 데 있다. 그래서다. 기아차 노조간부의 구속과 사죄에 이어, 최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이수호 위원장도 공식 사과와 함께 노동운동이 거둬달 것을 다짐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다. 그러나 보라. 노동조합의 도덕성을 날마다 질타했던 저 부자신문들의 지면을.

### '권력형 비리' 드러나자 속셈 노골화

<조선일보>의 대기업노조 '짜잡아 비판'은 그칠 줄 모른다. 사실 "권력(權力) 노조는 절대적으로 부패한다"(1월27일자)에서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 노조들은 인사권과 경영권에까지 개

입하고 있다"며 이를 "권력의 맛"이라거나 "노동귀족들이 밟아 가는 코스"로 매도한다.

가장 집요하게 노동운동을 비난한 <중앙일보>는 자신의 노립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비정규직 보호는 정규직 양보가 우선" 제하의 사설(1월27일자)에서 "기아차 노조의 취직장사가 발단이 되어 정부여당이 파견근로 기간과 업종을 확대하는 '비정규직보호입법'을 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미 술한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노동부가 추진하는 입법은 '파견업종의 전면 확대'로 비정규직이 늘어날 게 분명한 악법이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부자신문답게 "입법과정에서 엉뚱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엉뚱하게 "기업부담만 늘어나는 경우"를 우려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접근보다는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을 어떻게 유연하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하란다. 이어 곧바로 민주노총을 겨냥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법안 통과시 총파업을 예고해 놓은 상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분명히 지적해두자. 민주노총이 노동부 입법안을 반대하는 까닭은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다. 애초 보호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쇄자살로 거세게 일어난 사회적 요구였다. 하지만 노동부 법안은 이름만 '보호'일 뿐이다. 오죽하면 지난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칼바람을 맞으며 결사적으로 저지에 나섰겠는가.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법안이 편향적이라는 평가가 나와 정기국회에서 보류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법안 강행 때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한 <중앙일보>의 공격에는 '마르크스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자부하는 정운영 논설위원까지 가세했다.

### 노동운동에 '건강한 비판'과 '불순한 비난' 구분

하지만 진보논객의 '훼절'에 쓸쓸할 때가 아니다. <중앙일보>를 비롯한 부자신문들의 여론몰이에 고무된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그리고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비정규직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노동청을 비롯한 권력형 개입 의혹엔 모르쇠다.

그래서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간부들의 도덕성에 쏟아지는 분노와 질타에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 참으로 노동운동의 도덕성 회복을 촉구하는 비판인가, 아니면 '노동운동 초토화'와 '비정규직 확대'라는 불순한 의도로 던진 올가미인가.

저 부자신문과 그에 편승한 노동부의 '도덕'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건강한 민주시민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 도덕성 회복 촉구와 더불어 '불순세력'에 대한 감시가 아닐까.

만

화

방

